10.15686/fkl.2020..50.225

『청맥』에 나타난 리저널리즘의 탈냉전지(知)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젠더

—특집 및 권두언을 중심으로

김복순
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현대문학 전공

목차

1 반둥 정신의 한국적 수용 문제
2 제3방안의 방법과 젠더
2.1 얄타체제 및 '빵/자유'의 이분법 비판: '미국=한국=아비'의 부정
2.2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국가·매판시민·경제주체'의 남성젠더화
2.3 문화식민론 극복: '엽전의식·소비'의 여성젠더화
3 결론: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과 『청맥』의 한계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1046563).

『청맥』이 제시한 제3방안의 탈냉전지(知)는 크게 얄타체제 및 자유/빵의 이분법 비판,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문화식민론의 극복이라는 세 축으로 집약되었다. 최종심급은 민족모순(분단, 평화 통일)이었다. 『청맥』은 평화통일을 언급한 최초의 종합교양잡지(월간)였다.

정치기획의 첫 번째 특징은 '얄타체제를 거부하면서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계를 재사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는 점이다. 『청맥』의 탈식민 주체성은 '저항적 아시아민족주의'로서 반둥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청맥』의 리저널리즘은 자주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인 『사상계』의 저항담론 또는 박정희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정치기획의 두 번째 특징은 '빵/자유'라는 이분법을 거부한 점이었고,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극적 반미로서, '실질적인 우방개념을 설정하여, '공존 시대의 우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청맥』은 발전론이 함유하고 있는 신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50년대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와 방법론 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청맥』의 발전론은 발전론 자체의 속성과 다르게 반제·반식민을 확인시켜주었다. 『사상계』가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 원조 및 차관을 기초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정책적으로 삼았다면, 『청맥』은 위 정책의 경제적 종속성, 매판성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70년대 민족경제론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기획에서는 '민족성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식민론 극복' '민족문화론' '근대의 기점' 문제로 이어지는 기획을 펼쳐 보였다. 식민문화를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역사적 형성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발전'의 관점에서 이를 재사유하고 있었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한 것도 『청맥』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들은 당대의 여타 잡지와 다른 특징이었다.

미국(문화)이 부정되는 글에서는 젠더의식이 확연히 드러났다. '남성'이 미국=한국=아비로 설정되면서, '미군 기지라는 맥락을 은폐하고 여성에게 책임

을 전가하는' '정신 없는 아비'로 부정되었다. 이는 세대론의 관점이 투영된 것으로서, 남성성을 부정성의 영역으로 배치한 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다. '아비부정'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성격 및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정치세력과 그들의 젠더의식이었다. 이것이 『청맥』이 파악한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 중 하나이다. 『청맥』의 아비부정은 미·소라는 아비를 부정하고 새로운 보편을 상정하려 한 반둥정신과 호몰로지였다. 경제기획에서는 역사, 학문, 대중, 시민 등의 개념 속에 '여성'이 아예 '소거'되어 남성젠더화의 경향이 목도되었으며, 문화식민론의 핵심인 '엽전의식'과 '소비'는 여성젠더와 결합되어 있었다. 이것이 『청맥』에서 내셔널리즘과 엽전의식 및 내셔널리즘과 소비가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청맥』에서 개발의제와 젠더의제는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발전·탈냉전의 주체는 '남성젠더'였지만, '이중부정'을 통해 '발전의 주체-남성성'이 희석되면서 가까스로 확립된 것에 불과했다. 허약한 남성성은 '아버지' 대신 '젊은 아들'을 주체로 설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진보적 방법론이 허용되지 않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좌절될 방법론'임을 '스스로 예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던 개발독재 하에서 '발전의 주체'가 '허약한 남성성'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냉전-한국'의 역설이자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문핵심어: 제3방안, 냉전의 젠더, 발전론의 젠더, 반둥, 평화통일론, 아비부정, 자유로서의 발전, 반미, 내포적 공업화, 문화식민론

1 반둥 정신의 한국적 수용 문제

주지하다시피 세이론회의, 콜롬보회의(54년)에 이어 개최된 반둥회의(55년)는 제2차대전 후 아시아·아프리카의 제 국가들이 식민 국가의 보편과 다른 '또 다른 보편' '새로운 보편'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내셔널리즘의 일단이었다. '반제·반식민'을 기치로 내세웠던 만큼,[1] 미국 주도의 SEATO에 대한 '반기'의 성격[2]을 띤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다.

문명론적 관점에서 서구 또는 미국을 보편세계로 수용할 것인가, 새로운 민족적 관점을 충동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리저널리즘(regionalism)이 대두된다.[3] 리저널리즘이란 지역주의적 세계인식을 의미한다. 마루카와 데쓰시가 언급한 바와 같이 리저널리즘이란 국민국가 체제와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국민국가 '간' 체계의 규정과 한계를 초과하는, 보다 광역 차원에서의 세계인식을 의미한다.[4]

한국을 비롯한 미·소의 점령국(위성국)들은 냉전 전략, 즉 '대지역 구상' 하의 미국의 '자유'라는 가치/소련의 '정의'라는 관점[5] 하에 '상호 연동'하는 '제국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 후 한국의 제 부면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형태를 구축하게 된다. 글로벌 냉전 연구에서 제1세계와 제3세계는 상호 연동하는 것으로 지적된 바,[6] 일국적 관점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중층적으로 재사유할 필요가 있다. 트랜스내셔널/로컬의 인식틀은 '제국'을 바로 이해하고 '제국'의 지배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새로운 이론적 위상을 창출하는 것이다.[7] 리저널리즘은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국면에서 다양한 탈냉전지(知)를 추동하면서, 트랜스내셔널과의 관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제3세계의 해방'을 실천하는

1 '반둥 10원칙'은 기본 인권 및 유엔의 원칙과 목적 존중/영토 보전과 주권의 상호 존중/모든 인권 및 대소 국가의 평등/상호 불가침/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유엔 헌장에 따른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존중/ 강대국의 특수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 협정의 사용/ 정의와 국제적 의무에 대한 존중이다.

2 SEATO는 동남아시아조약기구로서,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이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 이행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과 소련은 제3세계 국가들이 단결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반둥회의에 경계심을 품었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역, 『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178쪽.

3 김복순,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9-220쪽.

4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 『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7-56쪽.

5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762쪽.

6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2015, 5-9쪽, 67-108쪽.

7 트랜스내셔널/로컬의 개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김복순, 「트랜스로컬리티로서의 '나쁜 여자'와 '불평등 정당화'의 남한적 특수성」,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참조.

동시에 세계냉전체제로부터의 이탈을 모색하는 일련의 '방법'이다.

그러나 반둥에서 주창한 '아시아적 제3세력 지향' '강력한 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제3의 길'[8]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권위주의 지배체제'로 이어졌고, 이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보편적 현상[9], '발전 측면에서 실패'[10]로 평가되기도 했다. 50년대 중반 이후 파키스탄, 버마, 수단이 군쿠테타로 넘어갔고, 태국과 이라크, 인도네시아에서도 파동이 계속되는 등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전통에 맞는 민주주의 체제 실현'이라는 이유로 '과잉' '독재' 상태에 도달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다. 서방식 대의제도의 실험은 오히려 '진기한 존재'로 화해 가고[11] 있었다.

58년을 지나면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우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 군사적 대결에 초점을 맞춘 '구형 냉전'에서 경제적 경쟁에 초점을 맞춘 '신형 냉전'으로 변화한다.[12] 61년경 미국이 케네디-존슨의 유연한 대응(flexible response)전략을 채택했고,[13] 프랑스와 중공은 미·소 양국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에 반대하면서 국교수립(64년)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프랑스의 중공 승인은 냉전체제의 다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트랜스내셔널 질서가 양극성에서 다극성으로 전환되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거기다 인도네시아, 프랑스, 아랍공화국, 중공은 '신생강대국의 대두'[14]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반면 반둥회의는 60년대 들어 좌절되기 시작한다. 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65년 예정)가 중공

8 사회개량형 민주주의(필리핀), 아랍민족주의(이집트), 교도민주주의(인도네시아), 기본적 민주주의(파키스탄), 네루이즘(인도) 등은 신생국이데올로기'로 언명되었다. 신생국강좌, 『신생국의 이데올로기』, 세계사, 1966.

9 우병규, 「시련받는 후진국민주주의」, 『청맥』 제4호, 청맥사, 1964.12, 26쪽. 우병규는 경희대 조교수이다.

10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164쪽.

11 우병규, 앞의 글, 22-23쪽.

12 정용욱·정일준, 「1960년대 한국 근대화와 통치양식의 전환」,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17쪽.

13 존 루이스 개디스, 홍지수·강규형 역, 『미국의 봉쇄전략』, 비봉출판사, 2020, 13쪽.

14 서동구, 「신생강대국의 대두가 의미하는 것」, 『청맥』 제6호, 청맥사, 1965.3. 서동구는 경향신문사 외신부장이다.

과 인도의 국경분쟁(62년)으로 인해 무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신형 냉전'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50년대 말부터 공동시장, 경제통합 등이 자주 언급되더니 유럽경제공동체(59년), 중남미경제통합을 위한 '푼타 델 에스테 선언(61년)', 동남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에카페 총회'(19차, 63년) 등에서 활발하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케네디도 이를 '발전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이라 언급한 바, 서구도 '제2의 마샬계획'[15]의 장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트랜스내셔널의 변화와 더불어 트랜스로컬들도 50년대 초와는 또다른 모색을 기도하고 있었다. '더 많은 자유'냐 '범 국민적 단합'이냐의 기로에서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이들이 권위주의적 지배의 코스(독재)를 선택하고도 다시 민주적 실험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와는 괴리'된 독재로 귀결될 것이냐였다. 아유 칸의 기본민주주의,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반다라나이케의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얀의 당쟁 없는 민주주의 등은 '일정기간 동안만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를 비상 가동한다'는 전제를 분명 깔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로부터의 일시적 이탈'은 서구식 의회민주주의 실험이 실패된 데 따른 반동으로서, '제2'의 제3의 방안이었던 것이다.

한국은 어떠했는가. 반둥정신은 어떻게 수용되고 있었는가. 남북한은 1차 반둥회의에 참여하지도, 초대되지도 못했다. 당시의 '반공 로컬-한국'은 정부·언론 할 것 없이 '반둥 격하'에 열을 올리면서[16] 반둥과 멀어지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우선주의는 '친미'여서, 반둥정신으로 일컬어지는 '반제·반식민'과 거리를 벌리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17]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 『사상계』가 저항담론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 란 '자유를 위해 자유를 제한'하고 '민주를 위해 민주를 제한'하는 냉전 자유주의·냉전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18] 냉전 자유주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보수

15 「푼타 델 에스테 선언」, 『사상계』 제98호, 사상계사, 1961.9, 230쪽.

16 '반둥 죽이기'와 관련해서는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間SAI』 제1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참조.

17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성균관대출판부, 2004, 40-57쪽.

18 이에 대해서는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김복순, 「학술

적[19] 입장으로서 '사이비 자유(ur-freedom)'[20]로 언명되기도 하는 바, 한국에서는 '반공우선주의'라는 더 보수적인 형태로 전개되었다. 냉전 자유주의는 4.19와 5.15을 거치면서, 4.19 정신의 계승이냐, 5.16 정권이 주창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길이냐의 문제로 전개되어 갔다. '민주·자유'냐/'일사분란한 발전이냐', 즉 '자유/빵'의 이분법적 의제와 결합되어 갔다. '권위주의적 지배체제의 근거는 '발전'이었던 바,[21] '자유'/'자유의 반환으로서의 발전'이 관건이었다. 5.16에 대한 당시 국민들의 일시적 환호 역시 '발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능했다.

이처럼 리저널리즘의 재편과제, 즉 탈냉전지(知)는 4.19를 거치면서 다양한 흐름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반(反) 식민주의의 무기로서 민주주의가 전유'되거나 '민족주의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사회주의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아시아 국가들의 국민국가 만들기의 과정과 겹치면서 아시아 지역 도처에서 목격되었다.[22] '새로운 민족주의로서의 독재'를 포함해 아시아 리저널리즘을 추동하는 탈냉전지(知)의 재편은 여러 형태로 분기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청맥』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제3방안'[23]을 제시하고자 했다. 『청맥』이 창간된 1963-4년간은 한국에서의 내셔널리즘 지형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던 시기였는데[24] 첨병으로서 이를 주도한 것이 『청맥』이다. 『청맥』은 4.19 이후 정치 사회적 현실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시대적 명제에 대해 가장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며 등장한 비판적 지식인 잡지였다. 1960년대 문학담론의 변화를 선도하는 비평

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참조. 『사상계』의 경우 58년과 63-4년을 소시기 구분점으로 변모해 나가는데, 창간 시기부터 58년경까지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0쪽.

20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역, 『문화적 냉전』, 그린비, 2016, 22쪽.

21 우병규, 앞의 글, 27-28쪽.

22 렁유, 김수현 역,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23 준특집 「제3방안」, 『청맥』 제13호, 청맥사, 65.11 참조.

24 홍석률,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정용욱 외,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적 토대였고 정신사적 배경이었다. 새로운 인텔리상을 모색하는 한편,[25] 시대적 명제에 대한 이론적, 문학비평적, 소설적 실천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사상사적, 비평사적,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

『청맥』은 『사상계』와 또 다른 방향에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사상계』가 친미·반공이라는 기본틀을 유지했다면, 『청맥』은 그 틀을 벗어나 탈식민, 탈냉전을 지향하고자 했다. 『청맥』은 우선 『사상계』의 냉전 민주주의·냉전 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장준하에게 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어서,[26] 일반적인 민주주의의 개념과 내포 및 외연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청맥』은 이러한 '자유의 지연 또는 반환으로서의 발전',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27]를 비판했다. 이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선점한 박정희 정권이 프랑스의 중공 승인 이후, 이에 맞서 글로벌 반공외교를 전개한 시점에서의 탈냉전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청맥』은 당대로서는 매우 '참신한' 관점을 보여주었다.[28] 이런 이유로 당대의 신세대 진보 지식인들이 대거 필자로 참여하였고, 문학계 인사만 하더라도 조동일을 비롯해 백낙청, 염무웅, 구중서, 김우창 등이 참여한 바 있다. 소설의 경우 백인빈, 오유권, 이범선, 박경수, 남정현, 이호철, 정을병 등 50-60년대에 비판적 인식을 가진 작가가 대거 발표하였다. 『청맥』의 필진은 세 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통혁당에 연관된 혁명적 지식인 그룹, 기성필자, 신진연구자 그룹이 그것이다.[29] 편집인 김진환, 주간 김질락, 신진회의 이문규, 새문화연구회의 이진영 등[30]

---

25 하상일, 「1960년대 『청맥』의 이데올로기와 비평사적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3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6, 470쪽.

26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7, 224쪽.

27 김연준, 「민주독재론」, 『청맥』 제2호, 청맥사, 64.9, 66-72쪽.

28 "비교적 아카데믹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동시에 매우 비판적이고 참신한 논문을 게재하였기 때문에 많은 인텔리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한다.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222쪽.

29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30 박태순·김동춘, 앞의 책, 230-231쪽 참고.

이 첫 번째 그룹이며, 박종홍 등의 학자와 임방현 등의 언론계 인사들, 여·야 국회의원 등이 기성 필자 그룹에 속하고, 조동일, 백낙청, 한영우 등이 신진 연구자 그룹에 해당한다. 혁명적 지식인 그룹의 필자보다는 교수, 기자 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물론 잡지의 특성 상 각 그룹 내에서도 필진마다 시각 및 전망의 편차가 존재할 수는 있다. 이를 감안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세 그룹별 시각 및 전망의 차이가 드러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청맥』에 대한 연구는 거의 걸음마 단계이다. 통혁당 사건으로 인해 20세기에는 거의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지 못하였고,[31] 신영복 등이 복권된 이후에도 연구된 것은 '문학비평'의 자리에 불과했다.[32] 최근 들어 탈식민, 민족주의, 아시아 표상 등과 관련한 성과가 이루어졌지만,[33] 민족주의와 자유·민주 등의 개념의 교차성 양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 기존 연구에서는 '식민성'에 주목하여 발전론 및 종속성, 냉전성을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과연 '식민성'이 『청맥』에서 '우선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젠더적 접근은 아예 한 편도 없다.

본고에서는 『청맥』이 지향하는 '다른'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특집'[34]을 중심으로 『청맥』이 '세계' '근대' '국민국가' '발전' '자유' '민족' 등에 대해 어떻게 상상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청맥』이 탈냉전의

31 『청맥』 편집진의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논외로 한다. 본고는 학술적 입장에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32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연구: 『한양』『청맥』『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4; 전용호, 「1960년대 참여문학론과 『청맥』」, 『국어국문학』 제141호, 국어국문학회, 2005; 허윤회,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99-122쪽.

33 대표적으로 이동헌,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호, 문화사학회, 2012;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제39호, 상허학회, 2013;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53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7 등을 들 수 있다.

34 '준 특집' 및 권두언 등 편집진의 글도 포함한다. '준 특집'이란 함은 한 주제 하에 3-4편의 논문을 수록한 경우를 말한다. 특집의 경우 평균적으로 6-7편 이상의 논문이 제시되어 있다. 『청맥』의 경우 '준 특집'을 적극 활용하여, 매호 2-3개의 준 특집이 존재한다.

역사를 다층화하는 방법, 『청맥』의 탈냉전 기획이 민족·자유·민주·민중·계급·여성·노동 담론을 동원하는 방법 등도 검토할 것이다.

『청맥』은 창간호부터 매호 특집을 제공하였으며, 65년도에는 거의 매호 2개씩의 특집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집의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어에 이르기까지 전 부면을 아우르고 있었으며, 주제마다 탈냉전, 탈식민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다.[35] 주지하다시피 '특집' '준 특집' '권두언' 등 편집진의 글은 잡지사의 사시(社是')를 강하게 드러내는 장치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청맥』의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청맥』은 특집 주제는 3가지로 대분된다. 정치기획, 경제기획, 문화기획으로서, 정치기획은 12개 특집에 총55편, 경제기획은 4개 특집에 총22편, 문화기획은 14개 특집에 총83편, 종합적 내용의 특집이 2개에 총11편 배치되어 있다. 초반에는 정치기획, 중반에는 경제기획, 후반으로 갈수록 문화기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기획이 가장 많았다. 이는 『청맥』의 '문화론 방법'[36]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맥』의 탈냉전지(知)는 크게 얄타체제 및 자유/빵의 이분법 비판,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문화식민론의 극복이라는 세 축으로 집약된다. 이를 관통하는 방법은 탈식민, 자유·민주의 재사유, 자주, 평화, 빈곤탈피로 지적되는데, 이 중

35 특집 주제를 일별해 보자면, 「아아, 이 민족의 수난」(창간호: 7편), 「한국 정당의 체질」(2호: 4편), 「남이 사는 내 나라」(3호: 8편), 「폭력시대는 갔는가」(3편) 「한국인의 이상체질」(8편) (이상 4호),「한미관계의 현 단계」(6편), 「한국의 타부들」(7편)(이상 5호), 「국제권력의 재편성」(4편), 「한국독점산업분석」(3편)(이상 6호), 「한국의 보수세력」(7편) 「한국인의 욕구체계」(4편)(이상 7호), 「일본은 다시 온다」(7편) 「軍의 정치학」(4편)(이상 8호), 「한국의 민족자본」(9호: 5편), 「$와 해병대」(4편) 「한국 매스콤의 반 사회성」(6편)(이상 10호), 「남북통일」(5편) 「해방 20년의 풀지 못한 과제들」(6편)(이상 11호), 「이것이 매판이다」(12호: 8편), 「한국의 민족주의」(13호: 4편), 「현대우방론」(14호: 4편), 「한국의 지식인」(15호: 4편), 「한국세대론」(16호: 5편), 「한국교육론」(17호: 8편), 「문화식민론」(18호: 4편), 「민족문화론」(19호: 6편), 「학문의 소작지」(20호: 6편), 「한국민족문화의 문제점들」(21호: 7편), 「우리말 우리글」(21호: 4편), 「현대와 유교」(23호: 5편),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24호: 5편), 「왜 우리 당이 이겨야 하나」(25호: 3편) 등이다.

36 문화전략에 대해서는 이동헌, 앞의 글 참조.

최종심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청맥』은 평화 통일[37]을 언급한 최초의 종합교양잡지(월간)에 속한다.[38] 국민국가 만들기의 중차대한 과제를 실현해야 했던 1950-60년대의 '트랜스내셔널/로컬' '리저널리즘' 문제를 『청맥』을 대상으로 살펴보는 일은 긴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트랜스내셔널/로컬의 문제가 '젠더'와 어떤 연관 하에서 논의되는지도 아울러 검토할 것이다. 여성에 관한 특집은 『사상계』와 마찬가지로 없지만,[39] 여성에 관한 기사는 『사상계』보다 더 많이 싣고 있다. 특집 「남이 사는 내나라」에서는 당대의 가치기준이 '자본'과 '성'이라 지적하고 있어, 당대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관점 및 인식을 보여 준다. 또 「규수작가의 특성」(윤수영, 4호)에서는 여성문학의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어느 여직공의 4일」(고화자, 20호)에서는 여성노동에 대해 고찰하는 등 여성문제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어 당대 어느 잡지와도 다른 젠더의식을 엿보인다. 당대 한국을 '탈식민' '탈냉전' 가능성의 자주적인 나라로 규정하고자 했던 『청맥』이 '발전의 주체'로 설정한 대상은 누구였는지, 『청맥』의 특집이 드러내는 '발전(재건)론'은 젠더의제가 실종(소거)된 기획이었는지도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청맥』에 대한 적확한 평가는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

37 평화모델에 대해서는 김학재, 앞의 책, 447-524쪽 참고. 김학재는 판문점 체제/제네바 체제/반둥 체제라는 냉전 동아시아의 세 가지 평화모델을 소개하면서, 반둥 체제를 '대안적 평화 및 탈식민 민족주의 모델'로 설명한다.

38 『민족일보』(61.2.13-5.19)도 평화통일론을 주장했지만 일간지였다.

39 『사상계』의 젠더에 대해서는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김양선,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인식」, 『한국민족문화』 제5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참고.

2 제3방안의 방법과 젠더

2.1 얄타체제 및 '빵/자유'의 이분법 비판: '미국=한국=아비'의 부정

『청맥』이 이전 잡지(담론)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지점은 정치기획 부분이다. 정치기획 필진의 대부분은 혁명적 지식인 그룹이며, 『청맥』의 입장은 편집장과 주간을 맡았던 김질락의 말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미·소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우리는 혁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소의 지배시대에서 벗어나 다원화된 시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40]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 60년대 중반의 '냉전의 성격 변화'와 관련된 세계사적 흐름을 나름대로 조망하면서, 미·소의 세력균형이라는 '틈새'에서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의가 있다면 한국주의 이외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41]고 한 박희범의 판단도 이와 동궤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통일은 권리이며 의무'[42]라는 인식으로 이어졌고, 창간사에서부터 '조국통일'과 '빈곤 탈피'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언급하게 된다.

> 국내외정정은 평화나 안정을 구두선처럼 외치면서도 이붓자식처럼 천대 멸시하였고(…)오랜 세월동안 한결같은 염원은 조국통일과 빈곤에서의 탈피로 집약되었으나 완전자주와 자립은 치자와 피치자 사이에 그

40 박태순·김동춘, 앞의 책, 230쪽에서 재인용. 밑줄은 필자가 강조한 것임.

41 박희범, 「우리 경제는 기로에 있다」, 『청맥』 제8호, 청맥사, 65.5, 28쪽.

42 박동운, 「통일의 조건과 전망」, 특집 「남북통일」, 『청맥』 제11호, 청맥사, 65.8, 22쪽. 박동운은 한국일보논설위원이다. 이 특집에서는 '부록'으로 분단 이래 국내외에서 발표된 통일방안을 총망라하여 5개로 분류하여 싣고 있다. 한국 역대정부의 통일방안, 국내 각 정당의 통일방안, 유엔의 통일방안, 미국 및 소련을 비롯하여 한국에 이르기까지 개인 및 사회단체의 통일방안, 북괴의 통일방안이 5개 분류이다.

어의와 가치판단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국민의 주권을 앞세워 조국을 통일해야 할 역사적 한 시점에 놓여져 있음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43]

『청맥』의 목표는 통일로서, 완전자주와 자립을 추구하며, 빈곤 탈피는 그 결과로 상정될 것임을 밝혀 준다. '무력에 의한 것이 아'[44]닌 평화통일임이 드러나 있다. 당시 한국에서 통일 의제는 이승만정권이 독점한 채 자신들의 북진통일론만 허용하였고 평화통일론 등 그 외의 통일론은 국가보안법으로 징치하였다. 50년대에 평화통일이란 단어는 꺼내서는 안되는 금기어였으며,[45] 5.16 이후에도 평화통일운동 계열의 인사들은 모두 구속되었다.[46]

60년대 중반 『청맥』은 그간 용공,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치되어 온, 막혀 있던 평화통일론을 다시 꺼내들어 불을 지펴 올리고 있다. 『청맥』은 해방 후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온 '유엔을 통한 통일론'을'통일 없는 통일론'이라 비판하였다.[47] 다른 권두언에서도 '빈곤과 후진성을 극복하는 첩경은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앞서 민족통일5개년계획이어야 한다'[48]고 함으로써 기본모순을 '분단'으로 보았고,[49]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인식하고[50] 통일에 대한 소극론과 절망

43 김진환, 「창간사」, 『청맥』 제1호, 청맥사, 64.8, 8-9쪽. 한자는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밑줄은 필자가 강조.

44 김질락, 「조국은 금치산자」, 『청맥』 제4호, 청맥사, 64.12.

45 서중석·김덕련, 『현대사이야기 3—조봉암과 이승만, 평화통일 대 극우반공독재』, 오월의 봄, 2016, 216쪽.

46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 조용수 등은 전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4.19 시기 잠시 평화통일론이 왕성히 제기되었으나 5.16 이후 다시 차단된다. 김삼웅,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신문사, 1994.

47 김질락, 앞의 글, 31쪽.

48 권두언, 「조국을 통곡한다」, 『청맥』 제3호, 청맥사, 64.11, 11쪽.

49 세계문화자유회의 한국본부가 1961년 4월에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육지수도 동일한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육지수,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 자유 하의 발전」, 김용구 편, 『자유 하의 발전』, 사상계사, 1962.9, 29쪽.

50 임종철,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 특집 「남북통일」, 위의 책, 33-43쪽. 임종철은 서울대 상대 전임강사이다.

론을 극복하되 주체적 자세로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로써 『청맥』의 저항담론은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51] 이는 '주권'이라는 표현에서도 확인된다. '청과 맥-누구의 나라인가'를 반복적으로 되물으면서 '주권은 어디' '주체성은 어디' 있느냐고 항변하고,[52] '한국은 한국인의 나라'(이상 13호, 65.11)라며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주성'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을 살펴볼 때 『청맥』의 탈식민 주체성이 나사콤(Nasakom)[53] 등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주창했던 반둥정신과 상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맥』은 당시의 한국 언론이 '반둥 격하'에 열을 올렸던 정황과 달리 '저항적 아시아민족주의의 원형에 가깝게[54] 반둥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열강들의 세계정책은 민족주의의 생장을 교묘하게 저지해 왔지만, 주체의식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35쪽)고 역설하였다. 당시 미국의 개입은 '개혁을 위한 개입'이라 불렸지만 실상은 '급진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적 개입' '혁명과 대립'하는 것으로 인식[55]되기도 했다. 『청맥』은 대립과 종속성을 탈피한, 자주성을 확보한 통일[56]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분단극복)이 최종심급인 것이다. 이처럼 『청맥』의 내셔널리즘은 자주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것이어서, 냉전 자유주의·냉전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사상계』의 저항담론 또는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57]와 차이가 있다.

'주권' '완전자주' '자립'에 의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거듭 강조되는 바 '식민성'이다.[58] 『청맥』은 '굴욕과 맹종'을 몰아치는 '신판 상전'[59]이란 신

51 특집 「한국의 민족주의」 13호, 특집 「남북통일」 11호, 참조.

52 김질락, 「청과 맥-누구의 나라인가」, 『청맥』 제13호, 청맥사, 65.11.

53 인도네시아의 독립 이후 수카르노가 정치이념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민족주의(nationalisme), 종교(agama), 공산주의(kommunisme)를 하나로 결합한 용어이다.

54 장세진, 앞의 글, 146쪽.

55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190-191쪽.

56 최근덕, 「한국인이 본 미국과 미국인」, 특집 「한미관계의 현단계」, 『청맥』 제5호, 청맥사, 65.1. 최근덕은 한양대 강사이다.

57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한양대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58 식민성과 관련된 특집이 3/4 정도이다.

59 권두언, 「조국을 통곡한다」, 『청맥』 제3호, 청맥사, 64.11, 10쪽.

식민성이 3.8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3.8선'은 비극의 기원,[60] '불행의 가장 큰 근원'[61]으로서 이는 얄타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얄타체제를 거부하면서[62]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계를 재사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조동필의 「냉전의 벽을 뚫어라」(3호, 64.11), 이만수의 「3.8선 기원의 재검토」(20호, 66.8), 임방현의 「도전 받는 한국의 좌표」(6호, 65.3) 등이 대표적인 글이다. 이 글들에서는 얄타체제를 이끌어낸 미국(루즈벨트와 트루만 대통령)의 '과오'를 비판하면서, 주체의식으로 뭉치지 않으면 '통일은 유엔의 연차적 유산'[63]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얄타체제의 부정은 양극 중심의 세계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지만, 그 초점은 '한국·아시아'의 자기화, 즉 새로운 리저널리즘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민족주의' '아시아의 시대가 오고 있다'(9호, 65.6), '한국은 한국인의 나라'(13호, 65.11) 등의 「제3방안」[64]을 제시하면서 반둥정신이 보여준 제3세계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특집 「아시아는 변형하고 있다」(9호, 65.6, 4편)를 비롯해, 민준기의 「아시아민족주의의 과제」(15호, 66.3) 등에서도 확인된다.

정치기획의 두 번째 특징은 '빵/자유'라는 이분법[65]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글은 우병규의 「시련받는 후진국 민주주의」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66] '자유의 지연 또는 반환으로서의 발전'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제2차 대전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의 '새로운 보편 만

60 이만수, 「3.8선 기원의 재검토」, 『청맥』 제20호, 청맥사, 66.8. 이만수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이다.

61 박동운, 앞의 글, 22쪽.

62 임방현, 「도전 받는 한국의 좌표」, 특집 「국제권력의 재편성」, 『청맥』 제6호, 청맥사, 65.3, 78쪽. 임방현은 국제정치를 전공한 언론인으로 소개되어 있다.

63 김질락, 「조국은 금치산자」, 29쪽.

64 『청맥』 제13호, 청맥사, 65.11. 준특집 형태로 '제3방안'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 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65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47쪽.

66 김영준, 「민주독재론」, 『청맥』 제2호, 청맥사, 64.9, 66-72쪽. 김영준은 단국대 국방대학원 부교수이다.

들기' 또는 '새로운 민족주의 모색'이라 불렸던 '제3의 방법'들, 즉 아유 칸의 기본민주주의,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반다라나이케의 실질적 민주주의, 나라얀의 당쟁 없는 민주주의 등은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주의가 아니라고 가차없이 비판한다.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67]을 충족하지 못한 아시아·아프리카의 환경적 조건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라는 제3의 방법들은 진정한 탈냉전지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신생국들은 '일정기간 동안만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를 비상 가동한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빵'을 위해 '자유'를 희생했지만, 이는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낳았을 뿐 빵도 자유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병규는 '민주주의라는 가면 아래 정당화된 전체주의적 지배체제'[68]라 비판했고, 김영준은 '민주독재론'[69]이라 평가했으며, 서민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은 헌법 이전의 권리"[70]라며 투쟁을 정당화 했다. '박정희체제의 근거 역시 '발전'이었던 바,[71] 여기서의 발전이란 '빵'을 위한 '자유의 반환으로서의 발전'이라고 비판하였다. 서윤택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형식적 자유'를 내걸었지만, 그것은 소수의 선택받은 특권계급들이 횡포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을 뿐 자유를 유린하고 관제사상을 조장했다고 평가했다.[72] 빵도 선택받은 특권계급에 갔을 뿐이고, 자유는 모두에게서 유보당했다는 것이다.

주간인 김질락도 한국에서 자유는 '독재와 방종에 능욕당한 쓰레기통의 장미꽃으로 윤락하고 말았다'면서 '제국주의의 진열장에 나열된 마네킹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일갈한다. 김질락에 의하면 한국의 자유는 '관객의 맑은 정신을 최면하는 무대 위의 마녀처럼 '극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장을

67 일반 대중의 상당한 교육수준, 비교적 높은 국민소득, 독립분권적 인식, 안정적 중산계급, 사회적 평등의식, 관용과 독립자영의 개인의식의 5가지이다.

68 우병규, 앞의 글, 23쪽.

69 김영준, 앞의 글.

70 서민호,「자유를 위한 투쟁은 헌법 이전의 권리」,『청맥』제2호, 청맥사, 64.9, 139쪽. 서민호는 자민당 국회의원이다.

71 우병규, 앞의 글, 27-28쪽.

72 서윤택,「자유 자주의 도정」,『청맥』제14호, 청맥사, 65.12, 30-35쪽. 서윤택은 장로회신학대교수이고, 전공은 철학이다.

포기하고 남의 것을 선망하는 자기 '동굴의 오류'를 되풀이 해 왔다. 그는 '허탈한 자유에의 의지'나 '발전 없는 모방에의 권장'은 '참다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면서 '자유와 발전'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73] 당시 이승만 정권 등의 자유민주주의 개념에서의 '자유'란 '우리를 결박하고 억울한 죽음만을 강요한 사자의 기념비에 불과'(33쪽)해서 이를 진정한 자유라 볼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는 아마티아 센의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에 연결된다. 센은 진정한 발전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발전을 위해서는 독재, 가난 등의 부자유의 주요한 원인이 제거되어야 한다[74]고 강조한다. 경제적 빈곤은 '실질적 자유의 결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경제적 자유', 즉 '결핍으로부터의 자유'[75]를 연상시키는 지점이다. 센은 경제 발전과 자유의 확산이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균형잡힌 성장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기반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76] 1961년 미국에서 작성된 「대한행동방침」이란 문서에서도 당시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사회적 혼란'이나 '제2의 4.19의 발생 가능성'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라고 단언한 바 있으며, 통일운동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에 '민족주의적 열망'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유'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77]

『청맥』은 빵의 문제에 다가서지 못한 이승만정권도, 자유를 유보하면서 빵을 외친 박정희 정권도 거부하면서, '통일'과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두 의제를 '동

73 김질락, 앞의 글, 30-31쪽.

74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갈라파고스, 2013, 41-42쪽.

75 루즈벨트는 1944년 초 네 가지의 자유를 언급한 바 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그것이다. "개인의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이 없다면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김진희,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경제적 자유' 재개념화와 '경제적 권리 선언'」, 『미국학논집』 제43권 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11, 155-185쪽. 루즈벨트는 빵과 자유가 이분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다.

76 아마티아 센, 앞의 책.

77 정용욱, 「4.19 민주혁명인가 민족혁명인가」, 최갑수 외, 『혁명과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2018, 226-227쪽.

반 수용'할 것을 주장한다. 빵과 자유는 이분법적으로 선택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통일'이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이 『청맥』의 제3방안의 핵심이다. 반둥정신이 실패한 원인이 '제3세계가 나름의 독창적인 모델을 창안해 내지 못한 채 미국식 발전에 과몰입한 나머지 자유·민주라는 가치에 무관심한 결과'[78]라는 점에서 볼 때 『청맥』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의미가 크다.

정치기획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통혁당에서 내건 『청맥』의 역할 중 '반미 사상의 선전, 선동의 무기'라는 항목이 있었고[79] 김질락도 「조국은 금치산자」 등에서 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80] 미국과 한미동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층적이어서, 긍정과 부정이 혼효되어 있기도 하고, '반대'의 의미가 적극적/소극적으로 결이 다르기도 하다. 이를 뭉뚱그릴 경우 정확한 분석으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미에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도 그 의미가 크게 차이날 수 있다.[81] 또 적극적/소극적 반미도 가능하다. 전자가 미국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냉전 정책의 '일부'를 비판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예로는 「아메리카인에게: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송인복, 65.8. 11호)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의 모든 불행을 미국의 국가이성이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강조한다.[82] 후자의 예로는 정치적 경제적 종속관계, 일본에 비해 한국을 경시하는 '한계 우방론', 그리고 봉쇄전략을 소극적 제한적으로 해석

78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153-164쪽.

79 김질락, 『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서원, 2011, 17-51쪽.

80 『청맥』에서 반미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조국은 금치산자」의 경우, 여기서 비판되는 것은 '밖'으로 지칭되는 '제국주의 일반', '외세 일반'이지 '미국'만이 아니다. 19세기 후반부터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밖/우리, 외세/자주라는 대비 하에, 외세에 의해 굴절된 한국사를 비판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은 금치산자가 아니'므로 자주, 자유, 주권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미 제국주의만을 비판한다고 보는 것은 과잉 해석으로 보인다.

81 김복순,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91쪽.

82 조순환, 「미국의 과잉 확장」, 특집 「한국의 보수세력」, 『청맥』 제7호, 청맥사, 65.4, 178쪽. 조순환은 한국일보 외신부 기자이다.

적용하는 데 대한 반대[83], 원조에 대해 비판하되 '원조 철회를 주장하는 않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65년 1월호(5호) 특집인 「한미관계의 현단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된다.[84]

미국은 '해방의 은인' '어쩔 수 없는 은인' '우방'이고 '어쩔 수 없이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 존재이다. 거기다 '미국 사회가 인간존중의 사회이며,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85]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미국이 긍정되고 있다. 서철규의 「어두운 '아메리카니즘」 등에서는 한국적 전통도 미국(문화)도 부정되고 있지 않은데, 여기서 서철규가 제시하는 '적지적종(適地適種)' 개념은 소극적 반미에 해당한다. 토양에 알맞은 종자를 심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미국 것이라 하여 다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 것도 좋은 것, 나쁜 것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나라에 맞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적지적종에 의하면 우방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실질적인 우방개념을 설정해야 한다(62쪽)'는 것으로,[86] 『사상계』에서 반복적으로 '부정'되는 드골을 '긍정적'으로 소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드골은 미국의 냉전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주성'을 보여주었으며, 프랑스로 하여금 신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구주의 우방이지만, 생사를 같이 할 운명공동체는 아니다. 자유진영의 다극화는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라는 드골의 입장

83 이태근, 「미국 극동전략의 전개」, 특집 「한미관계의 현 단계」, 『청맥』 제5호, 청맥사, 65.1, 22쪽

84 이 특집에는 6개의 논문이 실렸는데, 이태근은 「미국 극동전략의 전략」에서 소극적 봉쇄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신영복은 「미국의 대한 원조 정책 비판」에서 "미국 원조 이전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자립하고 있었다. 거대한 원조가 우리의 무능에 편승하여 수요구조를 악화일로에 놓고 소비성향을 경이적으로 상승시켜 우리의 경제 체질을 원조 이전보다 훨씬 악화시켜 놓았다"고 항변하지만, 원조 철회를 주문하지는 않는다. 박준규도 「조약협정으로 본 한미관계」에서 동맹국으로 받아야 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 비감마저 든다고 토로하고 있다. 즉 미국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기보다 한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지위 및 대우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 서철규, 「어두운 '아메리카니즘」, 『청맥』 제16호, 청맥사, 66.4. 서철규는 경향신문 문화부 차장이다.

86 김홍철,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 특집 「현대우방론」, 『청맥』 제14호, 청맥사, 65.12, 62쪽. 김홍철은 외국어대학 교수이다.

과 관점을 『청맥』에서는 높이 평가[87]하고 있다. 김홍철은 「우방 개념의 현대적 의미」(65.12, 14호)에서 '냉전 하의 우방'개념에서 벗어나 '공존 시대의 우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국제정치 및 전쟁양상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준전시 외교(적극적 반공) 형태를 보인다면서, 공산국 일반에 대한 무차별 적대주의, 좌경 중립국에 대한 비우호적 규정 등을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미국(문화)이 부정되는 글에서는 젠더의식이 확연히 드러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와 양키」(편집실, 11호, 65.8)는 해방후부터 1961년 이후에 이르는 미군의 각종 범행, 범죄를 소개하면서 격분한다. 열차 내에서 부녀 3인을 겁탈 윤간, 납치 윤간하는가 하면, 사무실 안을 드려다 본다고 권총을 쏴 즉사시킨 사건도 있었는데, 강간 살인 협박 절도 공갈 등 다양하게 저질러지는 미군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필자는 '해방의 은인이 원수되는' 악감정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눈여겨볼 지점은 미군의 성범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풍기문제는 미군측의 책임보다도 오히려 조선인 여자측의 자각부족에 있다'고 언급하는 부분이다.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 미군'을 명확히 하면서도, 강간 문제에서만은 '조선인 여자측의 자각부족'임을 강조한다. 이는 '피해자다움'을 연상시키는 바,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중심주의적 젠더의식을 드러낸다. 각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필자는 '미국의 인도주의가 미국인에게만 해당되는가'라고 질문한다. 우리 국민이 이 땅에서 주권의식을 누릴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강간 문제를 한미행정협정에서의 한국과 미국 간의 비대칭성 및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매우 불공평하게' 미군 및 미국 병사들을 주둔 국가의 통치권 및 사법권에서 완전하게 분리시켜, 주둔 국가의 주권을 해치고 있으며 미국의 자유적 제국주의의 모순을 담고 있다[88]고 지적받아 왔다. 이 불공평한 협약과 함께 비서양 국가들은 미 군사제국주의에 포함되는데,[89] 위 글에서는 이 심각하게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87 조순환, 「자유진영의 다극화」, 앞의 글, 58쪽.

88 문승숙·마리아 혼 엮음, 이현숙 역, 『오버 데어』, 그린비, 2017, 45쪽.

89 위의 책, 39쪽.

'남성'으로서 '일체'로 체화되고 사유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이 정당화되어 있다. 미 제국주의의 내면화가 목도되는 부분이다.

또한 위의 '자각부족' 발언은 '피해자 유발론'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한다. 우선 이 발언은 전형적인 2차 피해로서, 정조를 지킬 의무를 부각시키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성을 '스스로 피해를 유발한' '스스로 순결을 잃은 존재'로 낙인찍는다. 저 박인수 사건이 웅변해 주듯, '보호받을 만한' 피해자/'당할 만한' 피해자로 나누어 '성적자기결정권'이 '정조'로 대체되는 효과를 갖는다.[90]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정조에 관한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고 봄으로써[91] 여성이 처한 환경 또는 '맥락을 삭제'하는 위험을 초래한다. 즉 미제국주의의 군대 팽창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 미국과 한국이라는 위계의 권력관계라는 맥락이 삭제되어 있다. 미군들은 피주둔 지역의 여성을 결혼과 상관없이 성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92] 이러한 식민주의적 인식에 대한 비판은 『청맥』의 여러 글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미군기지는 미국의 냉전 전략 중 하나로, 젠더·성·인종·계급의 정치학을 형성한다.[93] '조선 여성'의 '자각부족' 발언은 미국/조선, 남성/여성, 문명/야만, 우/열/의 이분법적 대타항을 지시하면서 조선 및 여성을 후자에 위치시키고, 이로써 미제국주의를 표면화 한다. 위 발언에서 이 글의 필자는 '남성'일 뿐 '한국인'이 아니다. 미국인/한국인이라는 맥락이 사라지고 남성/여성의 맥락만 남아

90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23권 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3.6, 43-75쪽.

91 1995년까지 성폭력을 다루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였다. 이는 성폭력을 "여성의 성적 위엄이나 고결함을 해치는 것이라기보다 여성에 대한 일부일처주의를 위반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다. 여성의 정조는 개인의 인권이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의 명예와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거다 러너, 강세영 역, 『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캐서린 매키넌,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참조.

92 문승숙, 「욕망을 규제하고, 제국을 경영하기—1945년부터 1970까지: 한국 내 미군 성매매」, 문승숙·마리아 혼 엮음, 앞의 책, 83쪽.

93 위의 책, 19쪽.

있는 것이다. 당대 최첨단의 진보적 잡지라는『청맥』에서도, 탈식민·탈냉전을 리저널리즘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청맥』에서도 성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잔존해 있어, 여성은 여전히 주변부였고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한국인이 본 미국과 미국인」[94]에서 최근덕은 '우방 미국'이 6.25에서 산화한 것은 '쌍방적'인 것임을 주지시킨다. 한국을 위해 희생된 것이라기보다 공동운명체의 일원으로서 전세계 자유진영의 공적과 싸운 것이라고 역설한다. 트랜스내셔널과 트랜스로컬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덕은 우리가 '미국 속의 한국'에 살고 있다면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사살된 인디언을 떠올리는데, 이 인디언 예화는 6.25때 미군 경비병이 쏜 총탄에 맞아 절명한 한국 여인을 떠오르게 하고, 미군부대 근처를 배회하다가 절도로 오인되어 피격당한 양공주를 오버랩시킨다. 미국 속의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은 터무니 없이 미국에게 피습당하던가 죽음을 면치 못한다.

미군 성범죄에서 보듯 정치기획에서 미국, 한국, 아비들은 부정된다.「코리아와 양키」에서 미국과 한국은 '남성'이라는 범주 하에서 동일 주체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자리에 동일하게 배치된다. 하지만 이 아버지들은 아들 세대에 의해 '정신이 없는 육체의 팽창'으로 '부정'된다.[95] 이는 세대론적 입장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지만[96] 혁명적 지식인들의 태반은 실제로 '아버지 없는' 자식들이기도 했다.[97] 침략자 표상의 미국을 통해 제국주의적 속성을 인식시키고, '제국주의의 남성성'을 지적한다. 이때 여성은 미국/한국, 아버지/아들, 침략자/희생자, 식민/피식민, 남성/여성의 성적 은유에서 '이중타자'이다. 삽화에서 드러난 바, 아버지는 이익을 절대로 나누려 하지 않는다. 무식하고 인색하고 만사를 금전 위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경멸한다. 구걸식의 간청이 있을 때까지 뻐기면서 돈닢을 던져 주려고 한다. 미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자본주

94 특집「한미관계의 현 단계」,『청맥』제5호, 청맥사, 65.1.

95 최근덕,「한국인이 본 미국과 미국인」, 특집,「한미관계의 현 단계」,『청맥』제5호, 청맥사, 65.1, 84쪽.

96 16호의 세대론 특집을 비롯하여, 준특집 '학생의 정치참여'(2호,3호), 컬럼 '대학의 소리'(13-18호), 연재 '대학가 반세기'(15-22호) 등이 세대론의 관점에서 기획되어 있다.

97 박태순·김동춘, 앞의 책, 217-218쪽.

의적 제국주의적 속성 및 미국과 한국의 관계망을 짚어 주고 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국회'와 공화당이 희화화 되면서 젠더의식이 간파되기도 한다. 6.8 선거와 관련하여 실시한 앙케이트에서 유경환 시인은 "영국의회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7대 국회는 옷을 벗기지 않는 한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도 있을 것"[98]이라면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부를 비판한다. 영국 국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치환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나라 7대 국회에서는 치환불가능성을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다. 박정희정권의 무소불위한 권위주의 정치가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독재'를 비판하기 위해 남성성과 여성성이 '동원'되어 있다.

한국의 아비는 더 구체적으로, 4.19를 망치고 5.16과 '화간'한 '한국보수세력'으로 지칭된다.[99] 5.16은 초기에는 정체된 수구현상에 대해 과감히 도전한 '혁신'(87쪽)이었으나, '구정치인 세력을 대량으로 영합'해 형태만을 바꾸어 놓은 '과거의 되풀이', '또 하나의 보수세력'이 되었다고 강조한다. 즉 한국=5.16 세력이 한국보수세력과 '화간'한 것이다. 5.16 세력은 '적극적인' '남성'으로, 그에 의해 영입된 보수세력은 '선택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성/여성=적극성/소극성의 의미배치도 있지만, 부정성의 영역은 미국=한국=남성=아버지=보수세력이다. '아비부정'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성격 및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정치세력과 그들의 젠더의식이다. 이는 남성 주체의 호명 메카니즘[100]의 통상적 방법과 다른 것이다. 즉 여성성을 비판하면서 남성성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성성을 비판하면서 새롭게 구축되는 남성성이다. '아비부정'은 『청맥』이 주체를 호명하는 방법으로서, 탈식민·탈냉전의 주체는 '부정적인 남성성'을 거부하는 '신세대의 새로운 남성성(젊은 아들)'이다. 하지만 이는 '남성성이 아닌 것은 아닌'이라는 '이중부정을 통해 가까스로 확립된 것에 불과했다. '이중부정'을 활용함으로써 '발전의 주체-남성성'이 '희석'되기

98 유경환, 「남자를 여자로 만들 국회」, 『청맥』 제27호(폐간호), 청맥사, 67.6, 108-109쪽. 유경환은 시인이다.

99 조세형, 「4.19 5.16과 보수세력의 재패」, 특집 「한국의 보수세력」, 『청맥』 제7호, 청맥사, 65.4, 88쪽. 조세형은 경향신문 편집부국장이다.

100 김은하, 『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참고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사상계』와 다른 점이다. 『사상계』에서는 '아비부정'도, '이중부정'되는 남성성도 제출된 바 없다.[101] 『청맥』의 아비부정은 미·소라는 아비를 부정하고 새로운 보편을 상정하려 한 반둥정신과 호몰로지이다.

허약한 남성성은 '아버지' 대신 '젊은 아들'을 주체로 설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진보적 방법론이 허용되지 않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좌절된 방법론'임을 '스스로 예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던 개발독재 하에서 '발전의 주체'가 '허약한 남성성'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냉전-한국'의 역설이자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2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국가·매판시민·경제주체'의 남성젠더화

경제 기획의 경우 4개 특집에 총22편이 제시되어 있다. 경제기획 관련 특집은 중반부에 거의 소개되며, 12호(65.10) 이후로는 전무하다. 2호의 「외자도입」, 6호의 「한국독점산업분석」, 9호의 「한국의 민족자본」, 12호의 「이것이 매판이다」가 대표적이다.

50년대가 아직 '발전'이 '배양'되던 시기라면, 60년대는 '발전'이라는 모험의 보편적인 틀이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은 시기이다. 2차대전 후 트루먼이 제4정책을 통해 '발전을 발명'하고 '제3세계를 발전시키는 구세주가 되겠다'고 자처한 후, '저발전'이란 용어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발전/저발전의 이분법적 관계로 전화한다. 저발전이란 표현은 발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저발전과 연관시킴으로서 발전의 의미 자체를 바꾸는 용어 혁신이었다.[102] 즉 저발전은 전후에 발명된 것[103]으로서,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저발전 상태의 국가들은 자기규정권

101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의 젠더—1950년대 사상계를 중심으로」, 73-125쪽.

102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 『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20, 123쪽, 143-148쪽.

103 Gustavo Esteva,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ctionary*, ed., Wolfgang Sachs, London: Zed, 1992, p.7

(right to self-definition)을 포기하는 대신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을 얻었다[104]는 것이 제1세계의 관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공동의 발전 정책을 도모하자는 목적에서 개최된 반둥회의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발전 모델'을 권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105] 즉 발전론은 일종의 서구 의존형 기획이었으며, 후진국은 서구인이 규정한 인식틀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종속적 경제 패러다임 속에 위치하게 되는[106] '거대한 역설'을 보여준다.

하지만 『청맥』은 이와 달랐다. 발전론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자기 규정권 포기'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매판성, 종속성, 식민성을 비판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국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서구 시각을 경계하고 부정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할 것도 주문하고 있었다. 『청맥』은 발전론이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50년대의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와 차이를 보인다. 『사상계』가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 원조 및 차관을 기초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정책적으로 삼았다면,[107] 『청맥』은 위 정책의 경제적 종속성, 매판성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intensive industrialization)를 강조하였다.

『청맥』은 세 유형의 후진국경제개발이론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후진국을 개방상황의 관점에서 저개발국으로 보는 바이너(Jacob Viner), 둘째는 자본존재량과 외부경제의 발달정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넉시(Ragner Nurkse), 셋째는 국제정치경제관계를 기준으로 종속국과 종주국의 관계에서 고찰하는 바란(Paul A.

104 필립 맥마이클, 조효재 역, 『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94-101쪽.

105 위의 책, 142쪽. 4장, 7장 참고할 것. 반둥회의를 비롯해 61년의 벨그라드 회의의 비동맹 선언과 77그룹의 탄생 등 저자는 '미국의 발전 모델 권장'이라는 역할을 반둥이 주요하게 '발전'에 기여한 점으로 보고 있다.

106 50년대 서유럽의 실질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아시아 아프리카와 비교할 때 5배였으나, 탈식민화 과정이 끝나가는 70년대에 이르면 아프리카는 8배 이상, 아시아는 8.5배로 더 벌어졌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160쪽.

107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제105호, 한국사학회, 2012.

Baran)의 이론이 그것이다.『청맥』은 넉시를 일부 긍정하는 가운데, 트랜스내셔널과 트랜스로컬의 관계를 '종속적'이 아니라 '호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바란의 입장을 지지한다.[108]

넉시는 구조주의자로 분류되는데, 그 이유는 제3세계의 개발과정을 방해하는 '구조적 장애'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일체화된 국가의 활동 및 제1세계에 대한 의존성을 탈피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구조주의자들의 해결책과『청맥』진의 의견이 일치한다. 바란은 종속이론가로서, 제3세계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실제로는 제1세계가 방해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구조주의와와 일치하지만, 제3세계의 지배계층이 종속적 부르주아와 결탁함으로써 제3세계의 개발을 저지하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다르다.『청맥』에서 '민족부르죠아지의 이면성'[109] '매판' 등을 언급하는 맥락과 같다. 이들은 구조주의자들에 의해 연구된 생산구조의 변화, 즉 산업개발을 예견하지 못한 점에서도 다르다.[110] 오드 아르네 베스타도 미국 모델의 약점을 미국의 자본주의가 식민 지배자의 자본주의와 결탁하는 데 있다[111]고 지적한 바 있다.『청맥』에서 띄운 종속이론은 7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화한다.

구조주의와 종속이론을 소개하면서『청맥』은, 네이산 보고서[112]를 참조하여

---

108 바이너의 이론은 정태론적이어서 동태적 성격을 지닌 경제발전의 문제를 다루는데 적합치 않다고, 넉시는 재정을 클로즈업시키고 있으나 후진국에서는 재정기구 역시 후진성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 몇몇 국가는 넉시의 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경제발전을 진전시킨 바 그 효용성을 인정한다. 바란은 후진국의 빈곤의 근원을 순수한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지 않고 정치적 사회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후진국의 앞날을 푸는 열쇠로서 호혜정신에 입각한 국제적 협조와 계획경제, 집단체제 등을 들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 중산계급과 선진국들이 근시안적 세계관에서 탈피하는냐에 따라 성패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신복영,「J. 바이너」,『청맥』제3호, 청맥사, 64.11, 91-98쪽; 장현규,「R. 넉시」, 같은 책, 99-107쪽; 구달회,「파울 A 바란」, 같은 책, 108-115쪽.

109 박한철,「신생민족국가의 동향」, 준 특집 '시론',『청맥』제8호, 청맥사, 65.5, 130쪽. 박한철은 국학대학 강사이다.

110 존 라플리, 김창수·김장생 역,『개발의 이해—제3세계에서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6, 29-38쪽.

111 오드 아르네 베스타, 앞의 책, 162쪽.

112『사상계』와 박정희 정권은 네이산 보고서를 '참조'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했지만,『청맥』에

마련된 바 『사상계』 경제팀 및 박정희 정권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비판하면서 '혼합경제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조, 차관으로 상징되는 매판적 경제구조(조국 없는 자본)를 벗어나야[113] '자립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114] 박종철은 「한국자본주의의 특징」[115]이란 글에서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을 '매판적 요소의 존재'와 '민족자본의 취약'으로 설명하면서, 일반국민이 소위 '삼중의 수탈기구'에 억눌려 희생당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저임금형태의 희생, 저가격형태의 희생,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희생이라는 3중의 수탈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각 글에서[116] 공통적으로 민족자본이 매판화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매판자본의 예로 '재벌'을 언급하면서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재벌이 매판자본화 함으로써 국민 전체를 노예화의 길로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경제의 세계독점자본주의에의 종속화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박희범은 착취적 성격의 외국자본 배제, 선진경제에 대한 경제적 예속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외국 자본을 도입하되 원시산업에 대한 투자를 배격하고 산업의 구조적 변혁에 필요한 산업, 즉 첫 공업화 단계에서는 금속 및 기계 공업 등 경제적 비약과 자주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되어야 함(65쪽)을 피력하였다. 박희범[117]은 로스토우의 경제발전단계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그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비판한 사람이다.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이 강대국과 약

서는 「네이산 보고서」를 강력 비판한다. 한국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아, 그 분석이 이론적인 허구나 피상적 관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이산 보고서 종합 비판 1」, 『청맥』 제14호, 청맥사, 65.12, 128-156쪽. 네이산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영준·류상윤·홍제환 역해,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네이산 보고서의 재발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참조.

113 박희범, 「민족자본육성의 길」, 특집 「한국의 민족자본」, 『청맥』 제9호, 청맥사, 65.6, 59쪽.

114 「외자도입」에 관한 '준 특집', 『청맥』 제2호, 청맥사, 64.9 참조.

115 박종철, 「한국자본주의의 특징」, 특집 「한국의 민족자본」, 『청맥』 제9호, 청맥사, 65.6. 박종철은 서울대 상대 전임강사이다.

116 박희범, 「민족자본육성의 길」; 이만기, 「민족자본의 생성과정」; 이규동, 「민족자본과 산업구조」; 이창열, 「민족자본과 매판자본」 참조.

117 박희범은 서울대 상대 교수로서, 군인출신(홍석률, 「1960년대 민족주의의 분화」, 앞의 책, 96쪽)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경제개발계획 입안에 참여한 바 있지만, 그의 '중공업' 중심의 '혼합경제체제'이론은 채택되지 않았다.

소국의 종속적 관계를 은폐[118]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냉전 상황에서 경제발전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로서의 성격을 띠었는데[119], 『청맥』은 미국식 발전 모델이 은폐하고 있는 '예속'의 문제 및 경공업 위주의 후진국 경제방안을 거부하고 '중공업 육성'을 강조한다. 경공업으로는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제·반식민적인 민족주의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이 『청맥』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또 박희범의 '주의가 있다면 한국주의'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청맥』의 경제기획 필진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경제개발 문제를 통일이라는 과제와 연관시켜 사유한 특징을 보인다.[120] 5.16 이후 경제개발 논쟁은 분단(통일) 문제와 분리되어 전개되었지만,[121] 『청맥』에서는 '통일 의제'를 재소환하여 발전론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창간사에서부터 줄곧 강조된 바 '빈곤'을 쟁점화 하지만 이를 로컬, 즉 한국 차원에서 일국적으로 사유하기보다 트랜스내셔널과 트랜스로컬의 관점에서 '분단' '통일' 문제와 더불어 중층적으로 재사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창간사에서부터 강조된 빈곤 문제를,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 시선으로 보면서 '발전'을 단순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단선적 경로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맥』의 경제기획 특집을 검토한 결과, 발전론이 『청맥』의 지배담론은 아니었으며, 발전론과 민족주의가 결합해 자립적인 민족경제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인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 박정희정권과 갈라지는 부분이다. 『청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발전론이 새로운 형태의 반제·반식민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며, 이 과정에서 제시된 민족경제 관점 및 종속이론 소개는 70년대에 민족경제론을 이끄는 견인차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2호(65.10)의 특집 「이것이 매판이다」는 매판자본, 매판경제만이 매판이

118 박희범, 「로스토우 사관의 비판적 고찰」, 『정경연구』, 한국정경연구소, 66.3, 97-98쪽.
119 김윤태 엮음, 『발전국가』, 한울, 1997, 60쪽
120 홍석률, 앞의 글, 203-205쪽.
121 위의 글, 202쪽.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매판정치인, 매판경제인은 물론 매판시민, 매판 학자, 매판 지식인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판문학과 매판윤리도 다루고 있다.[122]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매판시민, 매판학자, 매판 지식인, 매판 정치인, 매판 경제인이 '남성으로 젠더화'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매판시민 개념에서 시민은 남성이지 여성이 아니다. 학자,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개념상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시민, 학자 뿐만 아니라 국가자체가 아예 '남성'으로[123] 체현되어 있다. 허구로 존재한다는 '책임 있는 시민' 개념도 '남성'으로 배치되어 있어, 여성은 기껏해야 '이등 시민'일 뿐이다. 역사, 학문, 대중, 시민 등의 개념 속에 '여성'이 아예 소거되어 있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청맥』의 발전론 속에 여성은 '배제'되어 있으며, '발전이 가부장제 최후의 그리고 가장 야만적인 표현'[124]이란 언명이 말해주듯, 여성의 종속이 내재화되어 있다. 1960년대의 국가 주도 발전 모델에서 여성은 경제 주체의 타자였으며, 자본집약적이고 고임금의 공식 부문은 주로 남성의 영역이었던 반면 노동집약적인 비공식 부문은 여성에게 할당된 '이중경제모델'의 타자였다. 즉 여성은 이중타자였다. 1970년 에스테르 보세루프의 말처럼, 제3세계 국가에서 어떤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지건 간에 그와 상관 없이 여성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혜택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미 1961년 카이로회의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상세한 권고안을 제시했지만,[125] 『청맥』은 이와 화답하지 못했다.

그간 여성은 성, 계급, 민족, 이종 범주에서 서양-기독교인-백인-남성의 타자

122 민준기는 「매판시민」이란 글에서 완제품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사람, 공항을 드나들며 외래품을 사들여오는 고위관리들, 밀수입 두목을 그 예로 든다. 이들은 자본을 유출시켜서 국내 내수시장을 악화시키고 산업성장을 저해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의 희생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한다. 주체성을 망각한 채 지배계급으로서의 관료자본가의 피고용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매판지식인 역시 중개상인으로서 대중과 격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또 이승녕은 「매판학자」에서 학문에는 국경이 없지만 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다면서 한일동조론을 펴는 어용학자 등 식민사관을 내면화한 학자들과 이를 중개하는 언론을 비판한다.

123 너멀 퓨어, 김미덕 역, 『공간 침입자』, 현실문화, 2020, 16-17쪽.

124 반다나 시바, 류지한 역,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울력, 2003 참조.

125 박소현, 「제3세계 여성해방」, 『비동맹독본』, 현실문화, 2020, 401-403쪽.

로서 알리바이(부재증명)이다. 인류역사는 남성적 자기이해 및 세계이해를 보편화한 결과, 남성을 보편적 인간개념으로 절대화 하였다. 존재 근거, 인식 근거, 사유 근거에서 여성은 배제되었다. 그 결과 고래로 사회문화적 표준은 근본적으로 남성이었으며, 보편성, 객관성, 진리, 역사, 시민, 학자, 정치인 등의 개념 역시 남성으로 표준화된 남성중심적 인식론(male-centered epistemology)[126]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는 비젠더화가 아니라 남성젠더화이다.

2.3 문화식민론 극복: '엽전의식·소비'의 여성젠더화

『청맥』에서는 그 어떤 잡지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14개호 83편에 달하는 특집을 마련해 집중 분석하고 있었다. '민족성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식민론 극복' '민족문화론' '근대의 기점' 문제로 담론을 이어간다. 66년 6월의 「문화식민론」 특집, 7월의 「민족문화론」 특집, 9월의 「한국 민족문화의 문제점들」 특집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대의 상황을 신식민주의로 인식하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식민화'가 '식민지배의 최고형태'라고 크게 경계한다.

> (…) 현대의 신식민주의는 정신적, 무형적 간접지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식민화가 문제시 되고 있다 (…) 이미 식민성에 젖어든 사람은 무엇이 식민성인가를 판단할 기준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 식민화야 말로 식민지 지배의 최고형태이며 우리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최후의 함정인 것이다.[127]

언론인 김동영은 과거의 식민주의와 현재의 식민주의를 비교하면서, '식민성'을 '남의 나라적인 것'이라 규정한다. 정치적 종속, 경제적 예속, 군사기지화, 문화 및 생활의 모방 등을 그 예로 들면서, 식민성의 내포를 문화 및 생활 영역에까지

126 김복순, 「만들어진 보편과 젠더화된 근대미학」,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쪽.

127 김동영, 「문화식민화의 경우 ①」, 『청맥』 제18호, 청맥사, 66.6, 136쪽. 김동영은 언론인이다.

확장해 놓고 있으며, '식민성의 내면화'를 가장 우려하면서 경계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1960년대 초기 여러 잡지에서 제기된 것이었다. 1960년대에는 여러 잡지에서 민족성론, 국민성격론과 관련한 특집을 유행처럼 마련하고 있었는데, 『신세계』의 「사대주의」 특집(63.6), 『사상계』의 「한국적 사고의 병리」 특집(64.11), 『세대』의 「민족성의 재평가」 특집(64.6), 「국가로 본 세계의 국민성」 특집(64.9)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주로 한국인의 민족성을 타자화하면서 '민족적 주체성의 결여', '과학적 합리성의 결여' 등 '제도에 미달하는 생활습속과 행동양식'이라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식민주의적 시선의 내면화를 드러내는 동시에 후진국 콤플렉스의 신경증[128]을 확인시킨다고 평가되었다.

특집명에서도 확인되듯이 「남이 사는 내 나라」[129]는 '주체성의 상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것이 곧 '자기파멸을 의미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인가 남인가'라고 질문한다. 문학, 음악, 언어, 종교, 이론, 오락, 윤리, 유행의 8개 부분에 대해 진단하면서, 외래적인 것이 유행하는 것을 비판하지만 그러한 체질 속에 면역성 또한 생겨가는 것이라면서 '전통의 현재적 생명'이 있음을 지적한다. '전통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극복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일변도의 타 잡지 논조와 다르다.[130]

이 중 박정자의 「서세에 몰리는 윤리-가치기준은 '자본'과 '성'」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3c(cash, car, character) 시대로 접어든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자본'과 '성'이 대표적인 가치기준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성의 해방을 긍정적으로 보는 지점도 있으나, 전후의 서양바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잘못된 노라'들은 비판된다. 그간 여성의 희생, 인내도 나름 인정하

128 반재영, 「후진국민의 정신분석」, 『1960-70년대 냉전 문화를 읽다』 학술회의 자료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20.1, 50-52쪽.

129 특집 「한국인의 이상기질」, 『청맥』 제4호, 청맥사, 64.12. 박정자는 경향신문 기자이다.

130 우리 문학의 인격상실로 상실 콤플렉스를 이겨내지 못했으며(문학), 조속한 외국가요의 범람 속에서 판소리는 청중에게 버림받은 망각지대였다(국악). 우리 언어는 양바람 일본 바람에 된서리를 맞고 있고, 사이비 종교들이 그들의 구세주를 덤핑하는 '신 없는 종교시장'이 되고 있으며, 한국신문의 프레스 콜로니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밀입국한 외래오락에 맹종하고 있거나, '자본'과 '성'이 가치기준이 된 세태를 비난한다. 하지만 비난에 그치지 않고 '두번 세 번 다시 굴려 '생각하는 모방'을 실천해야 한다고 극복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고 있지만, 자유부인, 아프레 걸 등의 무책임한 주체를 적극적으로 공격한다. 그렇다고 해서 파렴치한 남성군을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남성들의 성 행위=배설 행위라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 남성 본위의 악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여성해방을 제기하고 남성성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사상계』와 다르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공격되는 대상이 여성들이라는 점에서는 『여원』 등과 다르다. 『여원』에서는 '여성의 자유'가 폭넓게 고구된 바 있지만,[131] 여기서는 '여성의 자유' 사상이란 순결성 및 결혼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등 방종이어서는 안 되고, 여성-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주장하는데 반기를 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한한다. 그러나 아직 낙심할 단계는 아니어서, 책임 있는 자유, 스스로의 미점(美點)을 북돋우고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더욱 존중한다면 이와 같은 위기적 징후들이 극복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전후의 아프레걸 논의에서 보듯 '여성비판 방식'이 여기서도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당대 국면에서 '자본'과 '성'이 핵심이라고 진단한 지점은 매우 탁월하다. 하지만 필자는 이 탁월한 지적을 남성보다 여성을 더 공격하는데 활용한다. 결혼의 존엄성과 순결성은 마치 여성의 전유물처럼 언급되기까지 한다. 퇴폐=타락=비순결=소비=외래=여성의 코드 아래, '엽전의식'과 '소비'가 여성젠더와 결합해 있었다.

특집 「한국인의 이상기질(4호, 64.12)」에서 중요하게 재사유해야 할 논문은 조동일의 「골수에 찬 노예근성: 팔자소관」이다. 평론가 조동일의 문제의식은 당시 각 잡지에서의 민족성 특집이 숙명론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있다. 즉자적이며 스스로를 타자화 하는 팔자소관, 숙명론, 패배주의 등은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분석할 때 극복된다면서, 자주성은 그러한 분석 결과로써 확보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사상계』 등의 타 잡지의 특집 내용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는 「식민문화론」특집(66.6, 18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이 특집 역시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식민문화를 역사적 형성물로 자

131 김복순, 「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 『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리매김하고, 특히 '발전'의 관점에서 이를 재사유하려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이 고병익과 한영우의 글이다. 고병익은 「식민지문화와 문화식민지」[132]에서 식민지문화는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면서, 식민지는 피식민지에 정치적으로는 복종을, 경제적으로는 예속을 요구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언급한다. 피식민국가의 열등관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민족문화의 성격이 어떻게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는지 피력한다. 고병익의 글을 대하면 앞선 기획에서 드러난 바, 당대 외래문화에 침윤된 여러 비판들이 얼마나 즉자적이고 스스로를 타자화 하는 방법인가를 깨닫게 된다. 또 팔자소관이나 운명론 등 부정적 의미의 민족성이라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한영우도 「문화사대와 지배자철학」[133]에서 '사대'와 '사대주의'를 구분할 것을 피력하면서,[134] 사대주의 하에서 국왕과 귀족들이 사대국의 앞잡이가 되어 특권과 부를 확대해 가는 과정은 민중 및 하층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수탈되는 과정임을 알려 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 하의 민중의 저항은 이중의 적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한영우는 해방 이후 사대주의 현상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양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말하면서, 민족자본이 '외국의 원조' 및 사대주의자와 결탁한 매판자본에 의해 희생되는 과정이었다고 언급한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후진국=우/열=좋은 것/나쁜 것의 이분법적 구조가 형성되어 남의 것에 대한 미화와 더불어 내 것에 대한 불신과 천대, 패배의식, 열등감이 조장되는 등 사대주의가 고질화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19는 사대주의에 대한 '주체적 민중의 승리'로 높이 평가되고, 주체적 경제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

132 고병익, 「식민지문화와 문화식민지」, 『청맥』 제18호, 청맥사, 66.6. 고병익은 서울대 문리대 교수이다.

133 한영우, 「문화사대와 지배자철학」, 『청맥』 제18호, 청맥사, 18-33쪽. 한영우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소속으로 되어 있다.

134 사대가 소국이 자신의 자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즉 국가적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체를 살리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외정책으로서 비악(非惡)개념이라면, 사대주의는 주체성 상실과 반민족성을 주요 특징으로 삼는 악(惡)개념이다. 사대주의의 발생원인으로는 지리적 결정론과 사회적 인과론이 있는데, 반도론을 전자의 예로, 식민사관을 후자의 예로 든다.

사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매판경제구조를 지양하고, 매판자본을 어떻게 산업자본으로 전화시키는가의 과제가 개혁의 관건이라고 역설한다.

이 글은 사대주의를 식민국의 피식민국에 대한 '착취 욕망의 보편성'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피식민지(문화)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양상으로 설명한다. 즉 사대 및 사대주의를 일반화하여 한국만 유독 패배주의 및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피식민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이론화 한다. 한영우는 이를 극복할 주체로 부르주아나 지식인이 아닌 '민중'을 설정한다.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돋보인다.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발생을 중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호명한 것은『청맥』의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 유홍렬도「문화상으로 본 한국의 자주성」(3호, 64.11)에서 "우리 문화의 자주성은 '정치인의 힘'에 의해서보다도 '민중의 힘'에 의해 이룩되어 왔다"고 봄으로써,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호명한다. 1960년대 '민중'용어는 피지배층 일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주종이었지만,[135]『청맥』은 이와 달랐다.

더 나아가 고병익과 한영우의 글은 당시 여러 잡지에서 유행처럼 대두되었던 패배주의적 민족성론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고 있으며, 더 중요하게는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 문제 '식민사관 논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근대의 기점 논쟁은 60년대 중반 이후 70년대에 대논쟁으로 발전하는 바, 이 글에서는 국내(조지훈, 이어령) 및 미시나 쇼에이(三品彰英), 일본관학자들의 식민사관을 비판한 김용섭, 민두기, 이기백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식민사관 논쟁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고병익과 한영우의 글은 당시의 '발전' 개념이 '협의'로, 즉 GNP 등 경제적 개념으로 사용되던 관행을 수정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 글에서 '민족성'은 '발전론'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지만, 여러 민족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GNP를 근거로 '발전/저발전'을 판단하는 인식론적 틀을 수정해 주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족성을 전제한다는 것은 각 국가의 전통을 존중하

135 황병주도 같은 입장이다.「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참조.

는, 즉 제3방안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발전론이 주류 발전론을 비판한 이유가 주류 발전론이 전통적 사회문화를 파기한다는 점,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지향한다는 점[136]이었음을 감안할 때 『청맥』의 '민족성' 담론은 그 의미가 크다.

이진영은 「해방과 소비문화의 지배」[137]에서 '주체성과 거리가 있는' '자본에 봉사하는' 해방 후의 대중문화를 비판한다. 현금 한국문화의 성격은 '쾌락과 마취제'라는 딱지의 외국상품문화이며(37쪽), 강대한 고도자본주의의 과잉소비문화에로 예속된 상태이다(38쪽). 이 과정에서 문화적 식민화와 토착문화의 해체가 진행되었고, 후진 민족의 생산에의 의지는 위협받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소비문화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데, 이러한 특징은 『사상계』와도 맥락이 상통한다. 『사상계』에서도 소비, 사회적 병리현상 및 일탈을 여성과 연관시키면서 여성을 '타락의 주체'로 호명한 바 있다.[138]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러한 '마취적 역작용'의 대중문화를 '자본과 특권에 봉사하기 바쁜 시녀의 문화'(45쪽)로 배치하는 부분이다. '세계의 하녀'[139]를 두루 연상시키는 이 대목에서, 대중문화/민속(중)문화의 이분법이 여성/남성으로 젠더화되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점자본주의 및 신식민주의 하 대중문화의 소비문화적 성격이 '여성성'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생산/소비=식민성/피식민성=주체성/종속성=긍정성/부정성=남/녀라는 성적 은유의 젠더화가 목도된다. '대중문화'와 '소비'를 여성성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치적 공론장에서 배제·소외시키고 있어, 소비를 매개로 한 여성의 탈문화화, 탈정치화 기획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청맥』의 리저널리즘에서 '내셔널리즘이 소비와 결합'하는 방법인 동시에, '내셔널리즘이 대중문화와 결합'하는 방법이다.

이진영의 글에서는 소비가 여성성으로 배치되는 데서 더 나아가 '도덕적

136 장필화·노지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한국여성철학』 제20권, 한국여성철학회, 2013, 209쪽.

137 『청맥』 18호, 66.6. 이진영은 사회평론가로서, 전공은 사회학으로 표기되어 있다.

138 김복순, 「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 로컬-냉전지(知)의 젠더」, 95-100쪽.

139 파레냐스, 문현아 역, 『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악', '사회적 악'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다. 또 이진영은 대중문화의 부작용만 보고 긍정성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대중문화를 다양성과 취향의 차원에서 인식하지 못한 채, 대중문화 및 소비가 건전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발상을 드러낸다. 세계를 넘나드는 대중문화 및 대량소비의 트랜스내셔널적 동향에 대한 제3세계적 우려를 나타낸 것이지만, '자본에 봉사하는 대중문화'란 냉전시대에 미국이 전 세계에 퍼트린 가장 중요한 수출품으로서 대중문화와 소비주의는 사실상 동의어가 되었다는 트렌트만의 연구에 비추어볼 때,[140] 결과적으로 이진영의 글은 미국(문화) 비판에 해당한다.

예로부터 소비, 사치, 허영, 향락 등은 여성성과 자주 결합한 바, 근대에 들어 남성/여성=밖/안이라는 성별 이중규범이 조성된 이후, 밖에서의 남성의 생산은 미덕으로, 안에 위치한 여성의 소비는 악덕으로 설정되었다. 발전론의 대표적 이론가인 로스토우의 '경제발전단계설'에 따르면 발전은 경제적으로 '풍요'에 진입하는 것이고, 소비는 '발전의 최고 단계'이다.[141] 또 버나드 멘더빌은 소비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치도 공익에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서 사치·소비와 여성을 연결시키는 고정관념에 큰 획을 그어 보이기도 했다.[142] 소비에 대한 이와 같은 긍정적 견해와 달리 『청맥』에서 소비는 여성-악덕과 결합하였다. 발전론에서 여성은 정치·경제 뿐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배제된 채 비가시화되어 있었다.

발전/저발전의 이분법이 식민주의 담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제 및 타자화의 과정인 대중/민중, 생산/소비의 이분법 또한 또다른 식민주의 담론을 만들면서 여성을 '이중타자'로 재생산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빼앗긴 자'[143]들의 요구와 희망을 여전히 발전의 중심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진영이 말하는 발전이란, 엘리트의 시선 아래, 엘리트에 의해 '위로부터 강요되는' 발전이다. 이 지점에서, 『청맥』의 엘리트 중심적 발전론이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비판하는 '미국식 발전 모델'을 정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

140 설혜심, 『소비의 역사』, H, 2017, 434-435쪽.

141 로스토우, 이상구 역, 『급 반공산당선언: 경제성장의 제단계』, 진명문화사, 1960 참조.

142 버나드 맨더빌, 최윤재 역, 『꿀벌의 우화』, 문예출판사, 2010, 7쪽.

143 우르와시 부딸리아 편저, 김선미 외 역, 『빼앗긴 사람들—아시아 여성과 개발』, 산지니, 2015, 23쪽, 31쪽.

인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패로다임을 제공하고자 했던 『청맥』의 리저널리즘의 한계이며, 60년대의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과 『청맥』의 한계

푸코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이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발전' 개념의 등장 및 확산은 이를 정당화 하는 권력장의 전환을 반영한다. 60년대는 이미 발전담론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적인 틀로 자리를 잡은 시기였고, 트랜스내셔널 및 트랜스로컬의 정치 및 경제지형도도 세계적으로 커다란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발전론과 자유민주주의 결합뿐 아니라 공산주의, 중립과의 결합도 제3세계 도처에서 확인되는 바, 『청맥』은 바로 이러한 결합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제3방안라는 리저널리즘을 상정하였다.

『청맥』이 제시한 제3방안의 탈냉전지(知)는 크게 얄타체제 및 자유/빵의 이분법 비판,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 문화식민론의 극복이라는 세 축으로 집약되었고, 최종심급은 분단(평화 통일)이었다. 『청맥』은 평화 통일을 언급한 최초의 종합교양잡지(월간)였다. 정치기획의 필진은 주로 통혁당과 관련된 인물들로서, '탈냉전' 방법을 통해 탈식민이 구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원화로의 이행시대에 미·소의 세력균형을 '이용'하여 통일을 쟁취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 '얄타체제를 거부하면서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계를 재사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청맥』의 탈식민 주체성은 나사콤 등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주창했던 반둥정신과 상통하는 바, 『청맥』은 당시의 한국 언론이 '반둥 격하'에 열을 올렸던 정황과 달리 '저항적 아시아민족주의'로서 반둥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청맥』의 리저널리즘은 자주적 민족주의와 결합한 것이어서, 자유민주주의인 『사상계』의 저항담론 또는 박정희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다.

정치기획의 두 번째 특징은 '빵/자유'라는 이분법을 거부한 점이었다. 『청맥』은 자유를 주장하면서 빵의 문제에 다가서지 못한 이승만정권도, 자유를 유보하면서 빵을 외치는 박정희정권도 비판했다. 빵과 자유는 이분법적으로 선택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선택'되어야 하며, 그 방법은 '통일'에 의한 평화 달성이라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큰 의미가 있다.

정치기획의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을 전면 부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맥』은 미국과 한미동맹을 부정(적극적 반미)하지 않는다. '한계 우방론'과 '소극적 봉쇄전략' 등의 미국 냉전 정책의 일부를 비판하면서도, '해방의 은인' '우방' 등 미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맥』은 '실질적인 우방개념을 설정하여, '공존시대의 우방'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 개념은 『청맥』의 리저널리즘인 평화 통일과도 연계된다.

『청맥』의 제3방안은 발전론이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50년대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와는 방법론 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상계』가 국가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 원조 및 차관을 기초로 한 경제개발계획을 정책적으로 삼았다면, 『청맥』은 위 정책의 경제적 종속성, 매판성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자주적인 내포적 공업화(혼합경제체제)를 강조하였다. 경제기획의 필진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경제개발 문제를 통일 의제와 연관지어 사유하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 『청맥』의 차별성이다.

경제기획 특집을 검토한 결과, 발전론이 『청맥』의 지배담론은 아니었으며, 발전론과 민족주의가 결합해 자립적인 민족경제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인 것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 및 『사상계』, 박정희정권과 갈라지는 부분이다. 『청맥』의 민족경제 관점 및 종속이론 소개는 70년대에 민족경제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비록 미국식 발전 모델을 수용하고 있었지만 필립 맥마이클이 지적한 바처럼 자기결정권과 자기규정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몰수당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청맥』의 발전론이 발전론 자체의 속성과 다르게 반제·반식민을 가능케 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신진연구자들이 대거 필진으로 참여한 문화기획에서는 '민족성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문화식민론 극복' '민족문화론' '근대의 기점' 문제로 이어지는 기획을 펼쳐 보였다. 식민문화를 트랜스내셔널/트랜스로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역사적 형성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발전'의 관점에서 이를 재사유하고 있었으며, '식민성의 내면화'에 민감히 대응하고 있었다. 신진연구자들이 인문과학적 사유로 접근하면서 문화식민론 극복, 민중의 역사적 주체로의 호명으로 나아갔

다면, 첫 번째 그룹의 필진들은 그보다 '예속성'을 더 강조한 특징이 있다.

미국(문화)이 부정되는 글에서는 젠더의식이 확연히 드러났다. 『사상계』가 신식민성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결과 '여성 소거'를 『사상계』의 근대화 전략 중 하나로 채택했다면, 『청맥』은 이와 좀 달랐다. 『청맥』은 '남성'을 미국=한국=아비로 설정하면서, '미군 기지라는 맥락을 은폐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신 없는 아비'로 평가했다. 남성성을 부정성의 영역으로 배치한 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관점이었다. 부정성의 영역은 미국=한국=남성=아버지=보수세력으로 연결된다. '아비부정'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적 성격 및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정치세력과 그들의 젠더의식이었다. 이것이 『청맥』이 파악하는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 중 하나이다. 『사상계』에서는 남성성이 부정되거나 '아비부정'이 제시된 바 없다는 점에서 『사상계』의 '냉전의 젠더'와 다르다. 이는 세대론적 관점 및 탈식민·탈냉전의 리저널리즘적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청맥』의 아비부정은 미·소라는 아비를 부정하고 새로운 보편을 상정하려 한 반둥정신과 호몰로지이다.

『청맥』의 탈냉전지의 젠더는 남성이었지만, '부정되는 남성성'이었다. 그 키워드는 패배의식, 종속성, 구세대, 민주독재론 등이었으며, 긍정적인 대타항으로 설정된 남성성의 키워드는 자주, 자립, 신세대, 평화통일 등이었다. '부정되는 남성성' 대신 요청된 것은 '여성성' 또는 '여성성과 함께'가 아니었고, '새로운 남성성으로의 재탄생'이었다. 그것은 '남성성이 아닌 것은 아닌'이라는 '이중부정'을 통해서였다. 『청맥』에서 발전·탈식민·탈냉전의 주체는 '남성젠더'였지만 '이중부정'을 통해 가까스로 확립된 허약한 것에 불과했다. '이중부정'을 사용함으로써 '발전의 주체-남성성'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허약한 남성성'은 '아버지' 대신 '젊은 아들'을 주체로 설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진보적 방법론이 허용되지 않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좌절될 혁명'임을 '스스로 예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경제개발계획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던 당시에 '발전의 주체'가 '허약한 남성성'으로 설정된 것 자체가 '냉전-한국'의 역설이자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당대 최첨단의 진보적 잡지이면서 탈식민, 탈냉전을 리저널리즘의 방법으로 제시한 『청맥』에서도 성차별적, 인종차별적 인식은 여전히 잔존해 있었다. 즉 여

성은 미국/한국, 남성/여성의 관계에서 '이중타자'임이 확인되었다. 남성을 보편적 인간개념으로 절대화하여, 학자, 지식인, 정치인, 경제인뿐만 아니라 역사, 학문, 대중, 시민 등의 개념에서 '여성'이 아예 '소거'되어 있었다. 대중문화를 민속(중)문화와의 차별성 속에서 '시녀의 문화'로 배치하고, 문화식민론의 핵심인 '엽전의식'과 '소비'를 여성젠더와 결합시켰다. 생산/소비=식민성/피식민성=주체성/종속성=긍정성/부정성=남/녀라는 성적 은유의 젠더화를 노정하면서, 소비를 매개로 한 여성의 탈문화화·탈정치화 기획임을 확인해 주었다. 이것이 『청맥』에서 내셔널리즘과 소비(엽전의식)가 결합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엘리트 중심적'인 '위로부터 강요되는 발전'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비판하는 '미국식 발전 모델'을 정당화 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한다.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했던 『청맥』의 리저널리즘의 한계이며, 60년대의 시대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사적으로도 발전론의 젠더적 한계에 갇히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확대평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개발의제와 젠더의제는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상태였으며, 가장 최첨단의 탈식민·탈냉전 방법 하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주변부였고 식민지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냉전의 젠더'의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 주며, 이것이 『청맥』이 제시한 제3방안이란 리저널리즘의 '젠더'였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청맥』(64.8-67.6)

『사상계』(52.9-70.5)

단행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3. 47쪽.

김복순, 『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김삼웅, 『통일론 수난사』, 한겨레신문사, 1994, 9-180쪽.

김용구 편, 『자유 하의 발전』, 사상계사, 1962, 9, 29쪽.

김윤태 엮음,『발전국가』, 한울, 1997, 67-108쪽.
김복순,『페미니즘 미학과 보편성의 문제』, 소명출판, 2005, 15-25쪽.
김은하,『개발의 문화사와 남성 주체의 행로』, 국학자료원, 2017, 1-384쪽.
김질락,『어느 지식인의 죽음』, 행림서원, 2011, 17-51쪽.
김학재,『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1-690쪽.
박찬표,『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1-460쪽.
박태균,『원형과 변용—한국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 출판부, 2007, 1-400쪽.
박태순·김동춘,『1960년대 사회운동』, 까치, 1991, 215-240쪽.
서동진·박소현 엮음,『비동맹독본』, 현실문화연구, 2020, 401-403쪽.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글로벌 냉전의 지역적 특성』, 사회평론, 2015, 5-108쪽.
서중석,『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 성균관대출판부, 2004, 40-57쪽.
서중석·김덕련,『현대사이야기 3—조봉암과 이승만, 평화통일 대 극우반공독재』, 오월의 봄, 2016, 216쪽.
설혜심,『소비의 역사』, H, 2017, 434-435쪽.
신생국강좌,『신생국의 이데올로기』, 세계사, 1966, 1-395쪽.
장세진,『슬픈 아시아』, 푸른사상, 2012, 1-311쪽.
조영준·류상윤·홍제환 역해,『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 네이산 보고서의 재발견』,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1-543쪽.
정용욱 외,『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17-224쪽.
최갑수 외,『혁명과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2018, 226-227쪽.
하상일,『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전략』, 소명출판, 2008, 1-214쪽.
거다 러너, 강세영 역,『가부장제의 창조』, 당대, 2004, 1-470쪽.
너멀 퓨어, 김미덕 역,『공간 침입자』, 현실문화, 2020, 16-17쪽.
로스토우, 이상구 역,『급 반공산당선언: 경제성장의 제단계』, 1960, 진명문화사, 1-205쪽.
마루카와 데쓰시, 백지운·윤여일 역,『리저널리즘』, 그린비, 2008, 17-56쪽.

문승숙·마리아 흔 엮음, 이현숙 역,『오버 데어』, 그린비, 2017, 19-129쪽.
반다나 시바, 류지한 역,『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울력, 2003, 1-206쪽.
버나드 맨더빌, 최윤재 역,『꿀벌의 우화』, 문예출판사, 2010, 7쪽.
아마티아 센, 김원기 역,『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갈라파고스, 2013, 41-42쪽.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오강준 역,『냉전의 지구사』, 에코리브르, 2020, 153-178쪽.
우르와시 부딸리아 편저, 김선미 외 역,『빼앗긴 사람들—아시아 여성과 개발』, 산지니, 2015, 23쪽, 31쪽.
존 루이스 개디스, 홍지수·강규형 역,『미국의 봉쇄전략』, 비봉출판사, 2020, 13쪽.
존 라플리, 김창수·김장생 역,『개발의 이해-제3세계에서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6, 30-38쪽.
질베르 리스트, 신해경 역,『발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봄날의 책, 2020, 1-413쪽.
캐서린 매키넌,「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조애리 외 편역,『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56-77쪽.
파레냐스, 문현아 역,『세계화의 하인들』, 여이연, 2009, 1-456쪽.
프랜시스 손더스, 유광태·임채원 역,『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그린비, 2016, 22쪽.
필립 맥마이클, 조효재 역,『거대한 역설-왜 개발할수록 불평등해지는가』, 교양인, 2013, 1-510쪽.

논문

김건우,「1964년의 담론지형: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성장주의」,『대중서사연구』 제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71-90쪽.
김복순,「전후 여성교양의 재배치와 젠더정치」,『여성문학연구』 제1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7-60쪽.
_____,「학술교양의 사상형식과 '반공-로컬 냉전지(知)의 젠더—1950년대『사

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125쪽.

_____, 「신식민지 시기 반미소설의 계보와 서사원리로서의 젠더」,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287-332쪽.

_____, 「트랜스로컬리티로서의 '나쁜 여자'와 '불평등 정당화'의 남한적 특수성」, 『대중서사연구』 제21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5, 7-56쪽.

_____, 「『사상계』 기행문에 나타난 아시아 리저널리즘의 재편양상과 재건의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17-260쪽.

김양선,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127-163쪽.

김주현, 「『청맥』지 아시아 국가 표상에 반영된 진보적 지식인 그룹의 탈냉전 지향」, 『상허학보』 제39집, 상허학회, 2013, 295-336쪽.

김진희,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경제적 자유' 재개념화와 '경제적 권리 선언'」, 『미국학논집』 제43권3호, 한국아메리카학회, 2011, 155-185쪽.

렁유, 김수현 역, 「복수성 관리하기—냉전 초기 싱가포르 주변의 정치학」,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현실문화, 2008, 125-147쪽.

박연희,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한국문학연구』 제5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17, 283-320쪽.

반재영, 「후진국민의 정신분석」,『1960-70년대 냉전 문화를 읽다』 학술회의 자료집,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2020.1, 50-52쪽.

백영경,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와 지식의 정치」, 『여성문학연구』 제2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3, 7-36쪽.

오제연, 「1960년대 전반 지식인들의 민족주의 모색」, 『역사문제연구』 제25호, 역사문제연구소, 2011, 35-76쪽.

이동헌, 「1960년대 『청맥』 지식인 집단의 탈식민 민족주의 담론과 문화전략」 『역사와 문화」 제24호, 문화사학회, 2012, 3-29쪽.

이미경,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 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23권 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3.6, 43-75쪽.

이상록, 「1960~70년대 비판적 지식인들의 근대화 인식」, 『역사문제연구』 제18호, 역사문제연구소, 2007, 224쪽.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61-302쪽.
장세진, 「안티테제로서의 반둥정신과 한국의 아시아 상상」, 『사이間SAI』 제1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135-169쪽.
장필화·노지은, 「'발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한국여성철학』 제20권, 한국여성철학회, 2013, 207-230쪽.
전용호, 「1960년대 참여문학론과 『청맥』」, 『국어국문학』 제141호, 국어국문학회, 2005. 261-282쪽.
정용욱, 「4.19 민주혁명인가 민족혁명인가」, 최갑수 외, 『혁명과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2018, 226-227쪽.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학연구』 제105호, 한국사학회, 2012, 321-364쪽.
조봉암, 「평화통일에의 길」, 『조봉암전집』, 세명서관, 1999, 424-450쪽.
한영현, 「사상계의 시민사회론을 통해 본 젠더인식」, 『한국민족문화』 제50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4, 123-154쪽.
황병주,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제21호, 민주화운동사업회, 2009, 110-149쪽.
_____,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 한양대 박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1-311쪽.
허윤회,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상허학보』 제8집, 상허학회, 2002, 99-122쪽.
캐서린 매키넌, 「강간: 강요와 동의에 대하여」, 조애리 외 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2001, 56-77쪽.
Gustavo Esteva, "Development", *The Development Dictionary*, ed., Wolfgang Sachs, London:Zed, 1992, P.7.

Abstracts

Methods of Regionalism and Gender of Transnational/Local in *Cheong-Mag*

Kim, Boksoon

The 'Third plan' proposed by *Cheong-Mag* was largely composed of three methods: criticism of the Yalta system and the dichotomy of freedom/bread, independent intensive industrialization, and overcoming the cultural imperialist theory. The last instance was nation-contradiction(national division). *Cheong-Mag* was the first comprehensive cultural magazine (Monthly) mentioned peaceful unification theory. The decolonism of *Cheong-Mag* reflected the Bandung spirit as a 'resistance Asian nationalism'.

The second feature of the "Third Plan"'s political planning was that it rejects the dichotomy of "bread/freedom," and the third feature is that it criticizes America but does not deny it altogether. As a passive anti-Americanism he said that the concept of 'real ally' should be changed to 'friends in the era of coexistence'.

Cheong-Mag was accommodating the development theory, but it was aware of the neo-colonial imperialist nature. If『Sasanggye』pursued the national industrialization policy and made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based on U.S. government aid and loans as a policy, *Cheong-Mag* strongly criticized the economic dependency and comprador nature of that policy and emphasized independent 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cultural planning, the colonial culture was being re-exam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ransnational/translocal, while calling for overcoming cultural colonialism. This was different from other magazines of the same days.

In articles that show anti-Americanism, gender realization is evident. *Cheong-Mag* set "Men" as an "America=Korea=father," and evaluated it as a "mindless father" who "cover up the context of a U.S. military base and shift responsibility to women." The placement of masculinity into the realm of negativity was a very new perspective at the time. Emphasized through 'the denial of Father' were patriarchal, male-centered gender consciousness and the 'invasioning' character of imperialism. This is one of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Gender of the Cold War" in South Korea that *Cheong-Mag* understands.

In economic planning, "women" were completely "deleted" in the concepts of history, studies, public and citizens, leading to the male-centered epstemology, and "self-downing"(named yeopjeon) and "consumption," the core of cultural imperialism, were combined with female gender.

In the most critical magazine of the time, *Cheong-Mag*, the subject of the development, decolonization, and de-cold war was still the 'male gender'. Also, the development agenda and gender system were still not integrated. *Cheong-Mag* showed the South Korean speciality of the "Gender of the Cold War," which was the "Gender" of the regionalism called the third plan suggested by *Cheong-Mag*.

Key words: The Third Plan, gender of cold-war, gender of development theory, Bandung, peaceful unification theory, the denial of Father, development as freedom, anti-Americanism, independent intensive industrialization, cultural imperialism

본 논문은 2020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